

국회 상임위 여야 공방

외통위 “김정일 이상설... 정부 대책 있나”

국회는 10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언론 정책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배지 공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열리지 않자 김용중 의원이 '이러니 아버지가 똥통국회라고 했지' 하며 훈장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방위=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KBS 사장 사전조율 의혹 등에 대한 공격적 질의가 쏟아졌다.

전병헌 의원은 “최 위원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청와대 국무회의에 꼬박꼬박 참여했다”며 “언론의 중립성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허준제 의원은 “방통위는 국가의 방송통신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기구로, 본연의 업무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한다”며 “KBS의 경영성 회복과 방산 경영 해소를 위한 개혁방안에 대해 KBS 내부사정에 밝은 원로들의 고언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신문·방송 경영 정책과 관련,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방송과 통신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어 정책갈등과 중복규제를 초래,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언론으로서의 공공성과 중립성 등을 인식하지 못한 반민주적·반언론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외통위=여야 의원들은 이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진위파악에 나서면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 현안을 따졌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김 위원장의 신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든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현재 세

문방위 “언론 중립 위해 최시중 사퇴해야”

행안위 ‘차 주행세율 4% 인상 법안’ 통과

습체제가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닥쳐오는 위기가 한반도 전체를 삼켜버릴지 모른다”면서 정부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김 위원장과 관련된 중대 보고가 공개된 것은 무책임한 일로 국민의 불안감과 의혹만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행안위=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자동차 주행세

율을 4%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유가 연동 보조금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32%로 규정된 주행세율을 36%로 올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증가세를 2년간 폐지하고 이들 골프장의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도 4%에서 2%로 인하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추경안 11일 처리 불투명... 여야 氣싸움

與 “표결 처리 불사” 野 “공기업 보조금 전액 삭감”

靑 “추경 안되면 전기·가스료 인상 불가피”

국회 예결특위는 10일 추경심사 소위를 개최해 추가경정예산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11일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 강행을 통해서라도 추석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정부에 따라서는 전기·가스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에너지 공기업 부분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예산이 임박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11일 처리는 불가하다”고 최후통첩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경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1일까지 처리에 합의하고도 자꾸 엇박자를 내는데 정치도의에 어긋난다”며 “95% 이상을 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한 한전의 이익잉여금을 손실 보전에 사용하는 것은 송전탑을 뜯어 고칠로 팔아 손실을 보전하라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고유가로 인해 빚어진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이전에 정부 원안대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조4천억원, 자유선진당은 2조원 규모의 삭감요

구를 고수하고 있다.

야권이 삭감대상으로 분류한 항목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1조2천500억원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1조331억원), 자원개발 예산(1조1천억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한 예산을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 예산의 증액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 “최근 유가 추세를 감안하면 적어도 전기요금 5%, 가스 요금은 7.8%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여기에다 이번에 추경편성이 안 되면 전기요금은 추가로 2.75%, 가스요금은 3.4%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화 “호남인과 소통, 중간 역할 필요”

한나라 ‘국민통합특위’ 구성 추진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사진)은 10일 “지역화합특위를 만들어 호남인들과 소통하는 연결 고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에 제안했다.

정 의원은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호남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정부와 당에 대한 건의나 바람이 창구가 없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7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구성된 지역화합특위가 급조된 때문인지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다른 곳은 위원장이 정해지는데 등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박 회대표의 특별 지시로 기존 지역화합특위의 인적 구성과 역할을 대폭 강화·확대하고, 명칭도 국민통합특위로 바꿔 현재 특위를 구성중에 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행정체제 개편 탄력받나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에 따라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밤 TV로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기초 단위 행정구역은 100년 전 갑오경장 때 개혁해서 만든 것으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한 뒤 “경제권, 생활권, 행정 서비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쯤은 행정개편

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안팎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갖고 있는 평소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원론적인 차원일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앞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행안부로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국회 중심의 의견이 나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단 유보적인 스탠스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李대통령 “지금쯤 개편 있어야” 언급

행안부 “국회 의견 있으면 적극 지원”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상황임에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을 언급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또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여야가 충돌하는 등 해결할 수 없으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획을 하려면 전문가가 참여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하는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다. /연합뉴스

“뒤틀린 선거, 주민에 사과하라”

진보신당, 북구의회 규탄

진보신당 광주시당 북구 당원모임은 10일 광주 북구청 앞에서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뒤틀린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책임있는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패정당 민주당은 북구 주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성명을 내고 “20명의 의원 중 18명이 민주당 소속인 북구의회는 지방자치의 승리를 옥죄는 파렴치한 돈거래를 통해 자리만을 탐내는 악의 화신으로 둔갑했다”면서 “이같은 행태는 민주당의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식의 오만,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前 정권 인사 수사는 정치보복”

민주 ‘사정 정국 도래’ 반발

민주당은 10일 참여정부 등 전(前)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먼지떨이 사정’, ‘정치보복 기획사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을 시작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참모였던 정성문·홍경태씨의 건설공사 수주 위압의혹, 강원랜드 압수수색, 프라임그룹 비자금 의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이 전 정권 보복을 위한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 정권은 공안과 사정, 즉 ‘공사 정부’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고 비판 뒤 “설과 의혹만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기업활동을 마비시키고 국민생활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

A large advertisement for '무안국제공항출발' (Mu-an International Airport Departure). It features a map of Mu-an and lists various flight routes and services. The text includes: '신혼여행·가족여행·개별여행·골프여행은 편리한 무안공항에서 출발!!', '무안국제공항출발', '리니온이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면 좋은점', '공항엑스프레스항공(VO) 간세기', and '문의기간 및 출발시간'. It also lists flight schedules for October 12-13 and 14-15, 2008.